

## [ 오피니언 ]

光日春秋

이우영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도 상업성과는 거리가 먼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된 책들이 그나마 관심을 끄는 시기가 6월이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6·25와 관련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도 여전히 6월은 북한 및 통일관련 서적의 성수기인데 6·25에 더하여 2000년 6·15가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북한관련 책이 조급은 더 읽힌다는 사실이 바람직한 것 같았지만, 그 이유가 민족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착잡하였지만, 요즈음은 그래도 민족의 미래를 지향하는 6·15가 또 다른 배경이라는 점에서 조급은 나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일시적으로 6월의 북한 관련 서적 판매에 도움을 주는 6·25와 6·15사이에는 1950년과 2000년의 시간적 간극 보다 더 큰 거리감이 존재한다. 6·25가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된 전쟁이었다면, 6·15는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남북한 최고지도자간의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들이

그럼에도 6·25는 전장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사건으로 생각되며 보다는 증오를 확대하고, 그래서 새롭고 더 큰 전쟁을 지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6·25와 달리 6·15의 경우는 서로 반대되는 생각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반세기동안 지속되었던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애심과 북한의 정교한 전략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입장에

## 6·25와 6·15 그리고 기억의 정치

체로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현대사 특히 분단사에 대한 사고 방식은 극히 편협하였다고 할 수 있다.

6·25의 경우는 '상기하자'라는 구호아래 북한의 침략성, 김일성 집단의 무자비함, 사회주의에 대한 증오로 기억되었다. 물론 전쟁 발발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김일성과 북한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가 하는 점이다.

서 있건 남북관계의 변화나 그 속에 살고 있는 남북한 보통사람들의 변화보다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공과부나 김대중 정부의 이념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6·15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부족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관심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말이다.

6·15나 6·25가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지만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고, 민족구성원의 삶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현대사의 사건들도 마

찬가지지만,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는 편향적이고 심지어 왜곡되어 있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위세를 펼치고 있는 냉전적 사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냉전적 사고가 단순히 '안보'를 굳건히 하거나 국가적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정상적 사고가 아닌 상처를 끊임없이 엿내고자 하는 비정상적 사고를 조장하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이 아닌 투쟁과 갈등의 분열의식을 자극하고, 평화로운 삶이 아닌 전투적 삶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불행한 일상과 불안정한 삶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특정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일정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6·15와 6·25의 기억의 정치는 누가 주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곱씹어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기억과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종식의 LA통신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책'이라는 어느 책의 제목과 같이 그런 각오로 쓴다.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 소위 아들 선호 사상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다인식하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태아의 성을 미리 판별하여 마음대로 골라 낳을 수 있는 지금 남녀 성비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나는 늙어서 편히 지내려면 딸을 낳으라고 권한다. 30년 동안 노인환자들을 돌보면서 미국사람들의 경우 양로원에 있는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80% 이상이 팔들이었다. 팔들은 찾아와서 걱정스런 마음으로 자기 부모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본다. 아들들은 역시 같은 질문을 하지만 차이점은 얼마나 더 오래 살겠느냐의 앞에 '빨리 죽지 않고'란 표현이 생략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딸을 기피

집살이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세대들이 있다. 이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 아랫세대들에게 다음 두 가지 반응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첫째, 미련한 사람들은 분풀이로 며느리에게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욱 혹독한 학대를 가한다. 며느리가 편하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 억울해서 견디질 못한다.

반면 현명한 여성들은 내가 경험했던

이 고통은 되물려주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상기할수록 자기 며느리에게는 더욱 잘 해주려한다.

며느리가 불행하면 그녀의 남편이 자기아들이 풍자를 느끼게 되고 아들이 아프면 결국은 어머니인 자신에게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요, 반대로 며느리가 행복해하면 자기아들이 행복해 하고 결과

## 며느리를 사랑해야 아들이 행복

랄까? 감히 짚으라면 '여자들 때문'이 날까.

딸을 원치 않는 것은 남성인 아버지 보다 같은 여성인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다. 결혼생활을 해보니 여성(며느리)은 고생이 너무 심해서일 것이다. 그러면 누가 며느리로 하여금 고생을 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성(시어머니) 자신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여성(시누이)이 학대에 가세한다.

다른 면에서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여성들이 가족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도 미련하게 되어 버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도 다른 집에서는 그 집의 며느리인데 자기의 며느리를 자기 딸의 입장과 바꿔 생각하는 머리가 없다. 자기는 며느리나 올케에게 그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 딸 구박하는 사돈네는 악질 시어머니 악질 시누이라 비난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대부분 혹독한 시

적으로 어머니인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는 머리가 없다.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기쁜 아들인데 하며 아들에게 사랑 받는 며느리를 질투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보짓임을 알지 못한다.

위에서 지적한 부모에게 등한한 아들을 문제로 사실은 남자는 여자(미누라)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형제간에 이가 좋고 효도 잘 하기로 알려져 있던 기정도 일단 아들들이 결혼들을 하고 나면 가족 관계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경 우들이 많는데 이것 역시 대부분 여자들(밖에서 들어온) 때문이다. 올케가 시부모(자기 친정 부모)에게 잘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은 자기 시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 여성들이여, 너무 화내지 말았으면..

## 제과점 진열장의 케이크도 제조일자 표시해야

기고

신동식



21세기는 흔히 '정보화와 스피드의 시대'로 표현된다. 국내는 물론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도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정보와 속도인 것이다.

세계경제를 리드해가는 선진국이나 일부 개도국들이 디지털 기반의 IT산업을 중점사업으로 육성하고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

이나 무역거래업무에 e-Trade(전자무역)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세계적 수준의 IT기술력 및 정보화수준을 기반으로 전

걸어지는 '나트레이드 허브'는 수요자인 무역업체 중심으로 단절없는 무역프로세스를 실현함으로써 고임금과 높은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무역업체,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무역규모 6천억불을 넘어서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이와 맞물려 수출입 부대비용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수출기업이나 무역업체들에게 전자무역이 필요한 때다. 수작업과 종이서류 기반의 오프라인 무역체

## '전자무역'은 무역경쟁력 기반의 핵심

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됐다. 또 전자무역에 있어서도 1991년 정부 주도하에 관련법률을 제정, 전자 무역서비스 전문기업인 KTNET을 설립하고 전자무역포털서비스를 본격 추진해온 결과 무역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해 매년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더욱이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2003년 '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전자무역을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차세대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IT강국으로서의 풍부한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법과 무역업체의 자속적인 관심과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5월 9일에는 차세대 전자무역시스템인 'u트레이드 허브(uTrade-Hub)'가 새롭게 개통됐다.

차세대 국가전자무역시스템으로 일

계에서 벗어나 웹 기반의 온라인 무역방식을 도입, 시간과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스스로가 정보화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전자무역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u트레이드 허브'의 활용은 분명 무역업체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자무역'에 대한 마인드와 인식이 부족한 중소 및 지방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전자무역'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소득 3만~4만불, 무역 1조불 시대가 멀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8강의 무역대국시대에 대비, 전자무역 Hub의 강화와 이용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모아져야 할 때다.

〈KTNET 사장〉

## 보험증권 약관 한자어 잔재·전문 의학용어 투성이

쉽지 않았다.

코스레 골절은 그나마 설명이 돼 있었지만 '요골 원위단 골절로서 손목에 가까운 전완골 골절의 하나'라고 설명해준 그 줄이도 어려웠다.

제대로 보험금을 못 받게 하려는 꼼수라는 생각만 들었다.

충분히 쉽게 쓸 수 있는 용어들을 굳이 어렵게 쓰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전문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쓰도록 응용집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시설

## 광주역 이전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폐선 이후 광주역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본격화됐다. 광산구 주민은 비롯한 이전론자들은 광주역의 종착역 기능 쇠퇴 외에도 지하철·제2순환도로 등 교통체계 변화, 남·북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이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전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접근성,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광주역 존치가 지역경제에 더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이전 경우 도심 공동화의 가속화 우려도 문제다. 특히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은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광주역 이전 문제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한다. 이전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이전 논란은 차지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 이전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역 이전은 지난 2000년 도심철도

## 교육부·대학 '내신 갈등' 이전 끝내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내신 반영 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교육부가 강경방침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정책에 집단반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빛은 '내신갈등'이 수습될지 주목된다.

교육부의 원칙 없는 행정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갈등의 빌미는 내신 무력화를 시도한 일부 주요 대학이 제공했지만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행정적·재정적 제재까지 거론하며 대학들을 압박했지만 집단반발에 백기를 든 결과가 됐다.

교育부와 대학간 갈등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수험생들은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으로 내신과 수능 중 어느 쪽에 역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대학들은 이번 합의를 존중해 입시요강을 서둘러 확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권위와 대학의 자율성이 학생들의 이익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無等鼓

입국사증으로 불리는 비자는 제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중 군사 스파이를 샤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전후 이민 등을 억제하는 제도로 굳어진 것이다.

특히 지금에서 개인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모된다. 여기에 밀접한 국경을 통과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비자면제 협정 덕분이다.

기념삼아 여권에 스냅

프리도 찍으려면 일부 부탁을 해야 할 정도다.

세계에서 비자발급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는 미국이다. 특히 9·11테러 이후 외국인을 짐작해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미국은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한다. 미국을 찾는 해외 여행자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숫자다. 방문자 수 8위내 국가 중 미국이 비자를 요구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현재 미국비자를 면제받는 나라는 27개국이다. 그동안 한국은 비자 거부율 3%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민병관·민병관·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www.kwangju.co.kr

|  |  |  |  |  |
| --- | --- | --- | --- | --- |
| 편집국장 | 사 회 2 부 | 2200-619 | 총 무 부 | 2200-511 |


</